

“지극히 당연한 결정...국민 주권·시민의 승리”

이재명 파기환송 기일 연기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환영 민주당원 가입 4~10배 급증

서울고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에는 평소 대비 4~10배가량 당원 가입 신청이 급증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거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번 조치는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헌법 제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 주권의 시

간”이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서구을)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전남 여수갑)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 쿠데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대통령은 결코 법원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 연기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으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내란정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상황실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절차와 관례를 감안할 때 대선 본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 민주당 지역 당원 가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 대선개입 좌담회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광주시당에는 지난 1~6일 7시간 총 500명 온라인 입당원서를 냈는데, 대법원 결정 전에 비해 약 10배가량 당원 가입이 늘어났다. 계당직자의 설명이다.

전남도당 당원가입 신청도 같은 기간 300여명 접수돼 평소 대비 4~5배가량 당원가입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시·도당 관계자는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이후 뚜렷하게 당원 가입이 증가세를 보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반발한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윤현 기자

진호전 도의원 “전남 푸드테크산업 육성 체계적 지원”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 진호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안’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전남의 푸드테크산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흥 계획 수립, 기술 개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도시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실효성도 강화했다.

진 의원은 “푸드테크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거쳤다”며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통해 전남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내 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전력망 미래기술 실증 전초기지 도약

산업부 차세대 배전망 공모 선정 690억 투입...신기술 계속·평가

광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인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시에 위치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에 차세대 배전망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근 나주지역에 실제 배전망을 활용해 신뢰성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광주가 전력망 미래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4년간 총 사업

비 690억원이 투입된다.

테스트베드 구축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전 KDN,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10개 기관·대학이 참여한다. 테스트베드는 산업부가 2022년부터 개발했던 차세대 배전망 기기 및 운영기술 등 10개 과제의 기술성과를 실제 전력망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한국전기연구원 부지에 지중 및 가공을 혼합한 AC/DC 배전망을 구축하고 배전기기, 운영기술,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해 전력 신기술·기기의 계속·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나주에는 기존 AC배전망을 DC배전망으로 전환해 현장 운영기술과 신뢰성 검증이 이뤄지며 사업 종료 후에는 광주와 나주 모두 상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실증 인프라로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테스트베드 사업을 기반으로 광주를 국가 배전기술 실증 및 상용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실증 인프라를 발전시켜 시험·인증 기능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력망의 핵심 기술을 검증하고 신뢰성 평가를 통해 지역 내 전력계통망을 강화해 계절별 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력 인프라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광주는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순한 기자

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김건희·내란 특검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통령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근접한 시점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부권을 쓰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부터 이번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